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보도	2019.2.26(화) 조간	배포	2019.2.25(월)	
책 임 자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(02-2100-1730)	담 당 자	유미리 사무관 (2100-1737) 김민수 사무관 (2100-1788)		

제목 :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총회 참석

◇ 금융정보분석원(원장 : 김근익)은 외교부 · 국세청 · 금감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0기 제2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

◇ 주요 논의 주제

① 차기 FATF 부의장국으로 독일(대표 : Marcus Pleyer)을 선출

* 임기변경(1년→2년)에 따라 독일은 첫 번째로 2년간('19.7월-'21.6월) 부의장직 수행

② 가상자산(가상통화)* 취급업소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 구체화

* FATF는 "가상통화"를 "가상자산(Virtual Assets)"으로, "가상통화취급업소"를 "가상 자산 서비스제공자(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)"로 용어 통일해서 사용중

- FATF 국제기준 주석서를 개정하여 취급업소 등록, 가상 자산 송금 시 정보보유 등의 내용을 규정('19.6월 최종 확정)

③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및 멤버십 논의

④ 회원국(핀란드·중국)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논의 등

I. FATF* 총회 참석 개요

*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'89년 설립되어 미·중·일 등 36개국(한국 '09.10월 가입)과 EC·GCC 등 2개 위원회가 정회원으로 참여

□ 일시/장소 : 2019.2.17.(일) ~ 2.22.(금), 프랑스 파리

□ 참 석 자 : 금융정보분석원장 (한국 대표), 외교부, 국세청, 금감원

II. 회의 결과 주요 내용

1. 가상자산(가상통화)* 관련, FATF 국제기준 개정

* FATF는 "가상통화"를 "가상자산(Virtual Assets)"으로, "가상통화취급업소"를 "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(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)"로 용어 통일해서 사용중

- FATF는 지난 총회('18.10월)에서 '가상자산 취급업소'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주석서 및 가이드נס에 규정*하기로 결정

* FATF는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해·적용을 돕기 위해 주석서·가이드נס 등을 제공

- 주석서 및 가이드נס 개정작업을 '19.6월까지 완성하기로 함에 따라, 이번 총회에서는 주석서 및 가이드נס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

※ 가이드נס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범위·사업모델 등을 규정하고 고객확인 · 기록보관 · 전신송금 · STR 등 FATF 국제기준의 세부적용방안을 기술

- FATF는 주석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*를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

* ① 위험기반 검사감독(고위험 거래 또는 사업자 집중검사감독), ② 신고·등록, ③ 의무 불이행 시 제재, ④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·수취인정보 수집·보유, ⑤ 정보공유 등

-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송금 부문을 제외한 주석서 內 문구를 확정하고, 확정된 주석서 내용을 성명서(Public Statement)로 발표

<국제기준 R.15 주석서(Interpretive Note) 개정안 주요 내용>

- **(적용기준)** FATF는 가상자산을 "재산(property), 수익(proceeds), 자금(funds)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(corresponding value)"로 간주 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
- **(신고·등록)** 주석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·등록을 받도록 하고 미신고·미등록 영업시 처벌하도록 규정
 - 또한,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소재지는 아니더라도 상품·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도 해당국에 신고·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

- (송금) 주식서는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·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*를 수집·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

* 송금인·수취인 정보, 송금기관의 경우 해당 정보를 수취기관에 전달

- 다만, 규제방식 등에 대하여 민간분야 전문가로부터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관련 문구 및 내용을 추후 확정할 계획

2.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및 멤버십 논의

-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, 미이행·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(Public Statement)를 채택

-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(Counter-measure)를,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(Enhanced due diligence)를 유지

- 다만, 이란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(tougher) 어조의 성명을 통해 액션플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 기한('19.6월)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화된 조치*를 취할 것임을 경고

* 이란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감독을 예고

- 한편, 'Compliance Document' 국가 중 개선이 있었던 스리랑카·세르비아에 추후 현지실사를 진행하여 재논의하기로 결정

- 이외 다른 9개국에 대하여는 '현행 유지(status-quo)'를 결정하고, 캄보디아를 'Compliance Document'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

<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>

종류		효과	국가
① Public Statement	Counter-measure	사실상 거래중단,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	북한
	Enhanced due diligence	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	이란
② Compliance document		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	12개국*

* 예멘, 에티오피아, 스리랑카, 시리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튀니지, 파키스탄, 세르비아, 바하마, 보츠와나, 가나, 캄보디아

- 브라질은 상호평가에서 확인된 테러자금조달 법제상 미비점 개선요구에 따라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(19.2.20) 등 진행상황을 FATF 총회에 보고
 - 이에 FATF는 해당 법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, 향후 절차를 '19.6월 총회에서 재논의할 예정

3.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 (상호평가)

- 이번 총회에서는 중국, 핀란드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, 노르웨이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*을 점검함
 - *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
- 핀란드 상호평가 세션에서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인력확보 등 충실한 감독의 중요성을 확인함
- 중국 상호평가 세션에서는 FIU 제공 금융정보를 활용한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범죄에 대한 수사 전수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됨

4. 차기 부의장국 선출

- FATF는 독일(대표 : Marcus Pleyer)을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함
 - 임기변경(1년→2년)에 따라, 독일은 2년간('19.7월~'21.6월) 부의장직을 수임하며, 대표로 재무부 금융시장정책국 부국장인 Marcus Pleyer를 선임
 - * 최근 3년간 부의장국: 아르헨티나('16.7~'17.6), 미국('17.7~'18.6), 중국('18.7~'19.6)
-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(상호평가)의 최종결과는 중국 의장·독일 부의장 기간인 '20.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

참고 1 FATF (Financial Action Task Force) 개요

□ 설립 목적

- UN 협약*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(Financial Action)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(Task Force)로서 '89년 설립

* 비엔나 협약('88, 마약),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('99), 팔레르모 협약('00, 조직범죄), 메리다 협약('03, 부패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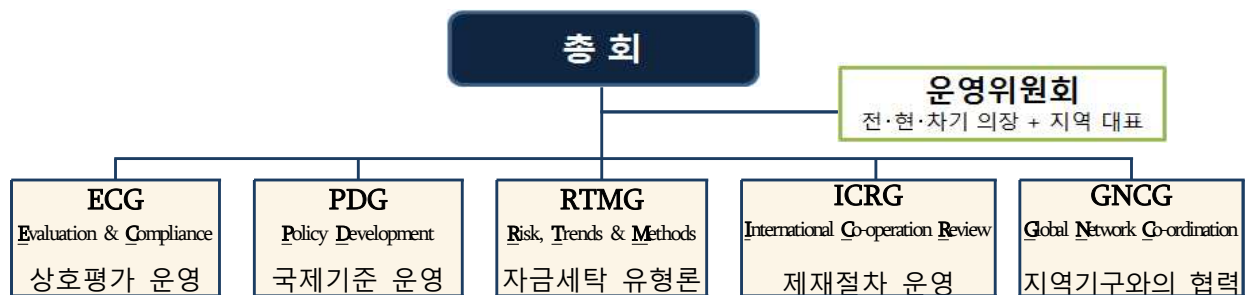
- 마약자금('89)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('96), 테러자금조달('01),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('12)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

□ 주요 기능

-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,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
-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
-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, 대응 수단 개발 등

□ 운영 방식

- 총회(Plenary), 운영위원회(Steering Group), 5개 실무그룹(Working Group)으로 운영되며,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



□ 회원 구성

- 정회원(36국+2기구), 준회원(9개 지역기구), 옵저버로 구성
 - 이외에도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(FATF Style Regional Body)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 *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 가입
- 우리나라는 '98년 아태지역기구*(APG), '09년 FATF 정회원 가입
 - * 41개 회원국 및 37개 옵저버(9개국 + APEC · ADB 등 28개 국제기구)